



주간통일정세 2010-01(2009.12.28~2010.01.03)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 주간 통일정세

2010-01

##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동향

###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 김정일, 신년음악회 관람(1/1,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2월 30일 평양 만수대예술극장에서 당·정·군 간부들과 함께 은하수관현악단의 신년경축음악회를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
- 김 위원장은 공연관람을 마치고 “새해를 맞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 열의는 비상히 높다”며 “전당, 전군, 전민이 새해전투에서 또 다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킴으로써 2010년을 조국청사에 영원할 위대한 승리의 한 해로 빛내야 한다”고 밝혔다고 통신이 보도
- 공연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일 내각 총리, 오극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리영호 군 총참모장,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김국태·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김일철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등이 동행
- 그동안에는 당·정·군 간부들이 대거 참석하는 행사의 경우, 김영남 상임위원장, 김영일 총리, 김영춘 부위원장 순으로 소개됐으나 이번에는 김 부위원장 대신 오 부위원장을 세번째로 거명해 오 부위원장의 향후 지위와 역할이 주목됨.

##### ● 김정일, 해군사령부 협주단 공연 관람(12/28,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헌법절(12.27)을 맞아 해군사령부의 협주단 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
- 공연에는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리영호 총참모장, 김원홍·현철해 대장, 정명도 해군사령관 등 군부 고위 인사들과 노동당의 최태복 중앙위 비서, 김경희 경공업부장, 장성택 행정부장, 박남기 계획재정부장,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등이 수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 김정일 이르면 1월초 방중(訪中) 가능성(12/31, 아사히 신문)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르면 1월 초순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고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이 12월 31일 보도
- 아사히신문은 한국의 대북소식통들을 인용, 2009년 10월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의 북한 방문 이후 북한 핵심 인사들의 중국 방문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 의제 조정과 관련 있



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신문은 중국을 방문한 북한의 주요 인사로 최태복 노동당서기와 김정각·주상성 국방위원 등을 거론

## 나. 정치 관련

### ● 평양시민 10만명, '공동사설' 실천 결의대회(1/2,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북한은 2일 김일성광장에서 10만명 평양시민이 참석한 군중대회를 열고 신년 공동사설 실천 결의를 다졌다고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보도
- 대회 참석자들은 결의문에서 “수도의 인민생활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하겠다”며 이를 위해 “시민들에게 각종 질 좋은 생필품이 더 많이 차례지도록 하고 알곡생산을 늘리며 축산, 양어, 과일기지의 생산능력을 높여 시민들이 하루빨리 그 덕을 보도록 하겠다”고 주장, 또 “수도의 정치사상적 진지, 계급진지를 튼튼히 꾸리고 국방공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며 인민군대를 적극 원호하겠다”고 다짐
- 최영림 평양시당 책임비서도 보고를 통해 “인민생활 향상에 총력을 집중하고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여러가지 소비품을 더 많이 더 질적으로 생산 보장하며 발전소와 탄광부문에서는 수도의 경제사업과 인민생활 향상에 필요한 전기와 석탄, 원료와 자재들을 제때 충분히 생산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
- 군중대회에는 김영일 총리,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

### ● 北신년사설, 韓·美 비난 사라져(1/1, 노동신문)

- 노동신문·조선인민군·청년전위 등 3개 신문 공동사설 형태로 발표한 신년사에서 “오늘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는 데 근본 문제는 조미(북미)의 적대적 관계를 종식시키는 것”이라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조선반도의 평화체제를 마련하고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북)의 입장은 일관하다”고 주장
- 특히 북한은 올해 신년사설 제목을 ‘당 창건 65돌을 맞아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해 인민 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라고 작성, 추상적인 정치 구호였던 제목에 ‘경공업과 농업’, ‘인민 생활’ 등의 용어가 등장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며,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정치·군사가 아니라 경제를 내세운 것도 이례적임.

### ● 조선신보, 올해 남북관계서 극적 사변 예감(12/1,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일 ‘북한이 신년 공동사설에서 인민이 실감하는 대변혁 일으킨다’라는 제목의 북한 신년 공동사설 해설 기사에서 “(북한)인민들은 과거 영도자의 용단에 의해 북남수뇌회담이 두번에 걸쳐 진행되게 된 경위를 잘 알고 있다”며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우리의 입



장은 확고부동하다”고 언급한 것은 “올해의 극적인 사변을 예감케 하는 의지 표명”이라고 밝힘.

- 신문은 “올해 공동사설의 북남관계에 대한 언급은 여느 해와 다르고, 많은 내용이 할애돼 있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방향제시가 있다”며 “2012년을 향해 내달리는 조선의 전략구상에서 민족문제가 주요한 기둥의 하나로 설정돼 있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라고 강조
- 또 공동사설이 6.15공동선언 발표 10주년인 올해를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규정한 데 대해 “전체 인민이 탐독하는 사설에 쉽게 엮을 수 있는 구절이 아니다”라며 “민족문제와 관련한 목표도 인민들이 실감이 동반될 때 비로소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라고 주장

#### ● 조선신보, 2009년 ‘北 9대 뉴스’ 선정(12/25, 조선신보)

- 조선신보가 12월 25일 ‘2009년 조선(북한)을 돌아보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2009년을 회고하며 올해북한의 ‘9대 뉴스’를 선정해 발표
- ‘9대 뉴스’ 중 1위는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의 12기 1차회의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국방위원장으로 재추대된 것이었고, 2위는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한 ‘광명성2호’의 발사
- 세번째 주요 뉴스로는 5월 25일 북한이 감행한 2차 핵실험이 선정됐고 이어 주민 노력동원 운동인 ‘150일 전투’와 ‘100일 전투’가, 네번째는 김일성 주석 생일 등 경축일에 평양 대동강변에서 펼쳐진 불꽃놀이가 다섯번째로 뉴스에 오름
- 이밖에 북한 축구팀의 월드컵 본선 진출,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방북 등 북중 친선의 전통 확인,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잇따른 방북을 계기로 한 북미관계 전환,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과 특사조의방문단 서울 파견이 ‘9대 뉴스’에 들었음.

#### 다. 경제 관련

##### ● 북한돈 對위안 환율, 국경 암시장서 170배 폭등(1/3, 열린북한방송)

- 화폐개혁 이후 불과 한달 사이에 북중 국경지역 암시장에서 북한 신권의 중국 위안화 대비 환율이 거의 170배로 폭등했다고 대북 라디오 ‘열린북한방송’이 3일 보도
- 방송은 북중 무역에 종사하는 조선족 소식통을 인용, “지난해 11월말 화폐개혁 직전 중국 돈 1위안은 북한 구권 588원(신권 5.88원 해당)과 교환됐다”면서 “그런데 12월 들어서는 1위안이 3일에 신권 50원(구권 5천원), 15일에 신권 520원(구권 5만2천원)으로 뛰더니 월말에는 1천원(구권 10만원)에 육박했다”고 밝힘.
- 2009년 11월30일 화폐개혁 직전 북한 돈 588원에 해당하던 중국 돈 1위안의 가치가 현재 신권 1천원으로 뛰었다는 것은, 외화교환시에는 100배 절상된 신권의 가치가 구권보다도 훨씬 낮다는 뜻임.



- 방송은 북한 돈의 ‘對위안’ 환율이 이처럼 폭등한 원인으로 북한 무역 기관들의 무리한 연말 수입 증대와 북한의 외화사용 금지 조치를 지목, 그러나 예년의 경우 북한 무역기관들의 연말 수입 확대에 따른 암시장 환율 상승 폭이 20~30%에 그쳐, 이번 환율 폭등은 주로 외화사용 금지에서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고 방송은 분석
- 방송은 “북한 당국의 외화사용 금지 포고문은 작년 12월28일 게시됐지만 사실은 화폐개혁 직후부터 그런 소문이 나돌아 북한 돈의 (암시장) 환율이 천정부지로 치솟기 시작했다”면서 “외화사용 금지로 북한 내부에 달려나 위안화가 풀리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환율이 얼마나 진정될지는 알 수 없다”고 보도

### ● 北백화점 TV 판매가격 1만~3만원(1/3, 조선신보)

- 북한 당국이 2009년 11월 말 화폐개혁을 단행한 이후 새해 들어 북한 최대규모의 ‘평양1백화점’에서 판매되는 북한제 텔레비전 1대의 가격은 신권 1만~3만원이라고 조선신보가 3일 보도
- 조선신보는 ‘백화점 가격조정 새 화폐로 장보기’라는 제목의 평양발 기사에서 TV외에 북한제 다른 상품의 가격과 관련해 담요 1천500~3천원, 평양소주 60원, 강서약수 20원, 과자 1봉지 10~35원, 인삼크림 35원, ‘가슴띠(브래지어)’ 80~140원, 학습장 5~15원, 사발 50~60원 등이라고 전언
- 신문은 현재 1천500~3천원인 담요의 경우, 화폐개혁 이전에는 5천~7천원에 거래가 됐다고 밝혀 상품가격이 구권과 신권의 교환비율인 100대 1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 거래가격을 현실화했음을 나타냈음.
- 또 과거에는 수출품이었던 라선시에서 생산되는 송이버섯술이 1백화점에서 120원에 판매되고 있고, 서평양백화점에서는 사과 1kg에 70원에 팔리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
- 신문은 “대중소비품의 가격이 많이 내려가고 호화상품은 가격이 유지되거나 올라갔다고 한다”고 전언
- 2009년 12월22일부터 1주일 동안 440여 품종, 400만 개의 상품을 입고시킨 평양제1백화점은 새해 첫날인 1일 손님들이 몰려 애초 오전 10시인 개장시간을 앞당겨 오전 7시30분에 문을 열었으며 오전 중에만 TV 155대, 담요 550장이 각각 팔렸다면서 “이날 백화점은 발 들여놓을 자리가 없을 만큼 손님들로 흥성거렸으며 손님들이 너무 많아 오후 3시에는 한번 입장제한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고 신문은 소개
- 신문은 이 백화점의 정명옥(53) 지배인의 말을 인용, “특히 농민이나 탄부를 비롯한 힘든 육체노동이 동반되는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속에 고수입 세대가 많다”며 “이들은 TV나 세척기, 냉동고와 같은 전기제품들도 구입한다”고 밝힘.
- 신문은 이어 “평양 형제산구역의 농장에서 일하는 리금옥(47)씨는 새 화폐로 5만원의 분배를 받았다”며 “그의 농장에서는 농장원들이 모두





천연색 텔레비(컬러TV)를 사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소개, 또 “이날 백화점을 찾은 어느 농장원은 온 가족이 농사에 종사해 세대수입이 145만원에 이르렀다고 한다”고 신문은 보도

- 북한 중앙은행의 조성현 책임부원은 지난해 조선신보와 인터뷰에서 “향후 상품 가격은 나라가 가격조정 조치를 취한 2002년 7월(7.1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수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음.

● **北농촌, 새해 벽두부터 농사채비로 분주(1/3, 조선중앙방송; 1/2, 조선중앙TV; 노동신문)**

- 북한 농촌지역에서 새해 벽두부터 거름내기에는 물론 영농물자 지원활동 등 농사채비로 분주한 모습이라고 북한 언론매체들이 3일 보도
- 조선중앙방송은 3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9년 10월 현지지도 한 황해북도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에서 새해를 맞아 거름내기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하루 동안에 백 수 십에 달하는 거름을 논밭에 내갔다”고 전언
- 방송은 “아침부터 올해 공동시설 과업관철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방송선전차의 선동이 힘있게 벌어지고 포전에서 영농전투를 지휘하는 관리일꾼들, 발동소리 높이 울리며 달리는 트랙터(트랙터)들과 거름을 싣고 부리는 농장원들로 하여 미곡벌은 불도가니마냥 끊어번졌다”고 소개
- 조선중앙TV도 2일 김 위원장이 2009년 11월 시찰한 황해남도 안악군 오곡협동농장의 유기질 비료생산과 거름내기 소식을 전언, 북한 군인들도 농촌지원에 나섰다며 “조선인민경비대 차백룡 소속 부대 군인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거름과 호미 등 영농물자들을 자동차에 싣고 평양 만경대구역 봉수농장을 찾았다”고 밝힘.
- 한편, 북한 내각의 김창식 농업상도 2일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에 기고문을 싣고 “모든 농장에서 정보당 알곡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리겠다”고 언급

● **평양의 백화점, 손님으로 붐벼(1/2, 조선신보; 평양방송)**

- 조선신보가 2일 평양발로 “새해를 맞으며 평양시민의 발길은 백화점을 향하고 있다”며 “백화점에서는 식료품, 일용품, 의류, 가구, 전기제품 등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새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소개, 개선문 옆 서평양백화점은 1일 오전 10시 문을 열자마자 손님들로 만원을 이뤘다고 조선신보는 밝힘.
- 한편 평양방송은 “수도 평양의 상업 급양망들이 1일 새해 첫 봉사의 문을 열었다”며 “명절 일색으로 단장된 평양 제1백화점으로는 사람들의 물결이 그칠새 없었다”고 전언



- **국제사회, 2009년 北에 4천만\$ 지원(1/1, 자유아시아방송)**

  - 2009년 한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총액은 전년보다 다소 줄어든 4천60여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일 보도
  - 유엔 인도지원조정국 대변인은 RFA에 “2009년 한국과 유럽국가 등이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의 식량, 의료, 농업, 식수 개선 사업 등에 4천60여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힘. 작년 북한은 국제사회에 별도의 지원 요청을 하지 않았지만 세계식량계획(WFP)의 긴급구호 사업, 세계보건기구(WHO)의 병원 보수 및 의료 지원 사업, 유엔아동기금(UNICEF)의 식수, 상하수도 개선 사업 등이 진행
  - 그러나 2009년 지원액은 2008년의 4천800만 달러에 비하면 16% 감소했고, 지원국 또한 14개에서 10개로 줄었다고 RFA는 전언, 또한 목표액의 절반도 채 모금되지 않아 유엔 긴급구호기금(CERF)이 작년 총 대북 지원의 절반에 가까운 1천900만 달러를 지원함으로써 북한은 짐바브웨와 함께 긴급구호기금의 최대 수혜국이 됐다고 방송은 소개
  - 국가별로는 스웨덴이 가장 많은 830만 달러를 북한에 지원했고 캐나다, 호주, 스위스, 핀란드, 룩셈부르크 등도 많은 액수를 지원한 나라로 꼽혔다고 RFA는 보도
  
- **北, 1월1일부터 외화 사용금지(12/30, 중국 중앙TV)**

  - 북한은 2010년 1월 1일을 기해 외화 사용을 금지한다고 중국의 중앙 TV(CC-TV)가 날짜가 적히지 않은 북한 인민보안성의 포고문을 인용, 30일 보도
  - 방송은 북한 주민들은 상점과 식당 등에서 달러화, 유로화 및 일체의 외화를 사용할 수 없으며 외국인들도 비용 지불을 위해서는 자신이 소지한 외화를 북한의 원화로 환전해야만 한다고 전언
  - 최근 평양을 방문한 한국 비정부기구(NGO)의 한 인사는 교도통신에 평양의 한 주요 호텔에서 외국인들은 더 이상 달러화, 엔화, 그리고 위안화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소개, 이 NGO 인사는 호텔에서는 단지 유로화만을 받았다고 덧붙임. 외환을 계속해서 받는 상점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외화를 쓰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고 이 NGO 인사는 전언
  - 데일리 NK는 함경북도 소식통을 인용, 인민보안성(한국의 경찰청에 해당)이 26일 달러, 위안, 유로 등 외화의 보유와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포고문을 발표했다고 전언
  
- **北, 중국 곡물수출 통제 강화(12/30, 열린북한방송)**

  - 북한이 최근 일부 곡물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고 ‘열린북한방송’이 30일 보도
  - 방송은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기사에서 “북한 당국이 콩과 녹



두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면서 “팥도 지름 0.45cm 이상의 것만 수출하도록 제한했다”고 소개, 이어 종전에는 곡물 포대가 어떤 것이든 상관없었지만 최근에는 아무 글씨도 쓰이지 않은 새 포대를 써야만 북한 세관이 수출 허가를 내 준다고 전언

### ● 주체철생산 성진제강 표창식(12/29, 조선중앙방송)

- ‘주체철’ 생산체계를 완성한 성진제강연합기업소 노동자, 기술자들에 대한 국가 표창식이 29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변영립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서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표창식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따라 성진제강에 김일성상이 수여됐음.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성진제강 노동자, 기술자 대표단에게 선물을 보냈다고 방송은 소개

### ● 화폐개혁 후 北실질임금 100배 올라(12/29, 오늘의 북한소식)

- 북한이 노동자 등에게 화폐개혁 전 액면가와 같은 월급을 지급해 실질적으로 임금이 100배 오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대북 인권단체 좋은벗들은 29일 소식지에서 “각 시, 군 공장과 기업소에서 노동자에게 12월 월급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임금은 일반 노동자 1천500원, 기능직 노동자 2천~2천500원 선으로 전과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힘. 북한이 최근 단행한 화폐개혁은 신권과 구권의 교환 비율이 1대 100이었으므로 종전과 같은 액수의 월급이 나왔다는 것은 임금이 실질적으로 100배 올랐다는 것을 의미
- 이 밖에 시당 일꾼 3천500~4천원, 보안원 3천~3천500원, 보위부원 5천원, 의사 3천~4천원, 교원 2천~3천원 등으로 월급이 정해졌다고 이 단체는 소개
- 좋은벗들은 “함경북도 고건원탄광기업소에서는 월급이 5천원 선이 되면서 노동자들이 받은 월급으로 자전거와 텔레비전을 사는 등 살림살이가 대변에 좋아졌다”며 “월급 지급 후 출근율이 높아졌고 노동자들도 일을 잘 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언
- 노동당 중앙은 화폐개혁 후 주민 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차원에서 일선 도·시·군당에 12월 월급분에 한해 노동자들의 실제 출근일수와 관계 없이 월급을 전액 지급하라고 지시했지만 일부 공장·기업소에서는 출근 일수를 따져 임금을 쥐 200~300원을 떼고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 일부 노동자들은 시당에 신고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이 단체는 전언
- 한편 북한 내각은 12월 식량을 우선 주민들에게 공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배급소에서 식량 구입가는 1kg당 쌀 44원, 옥수수 26원, 옥수수 국수는 28원으로 정해졌다고 전언
- 북한 중앙은행은 12월 4일 조선신보를 통해 화폐개혁을 공식 발표하





면서 “이 조치는 성실히 일하는 근로자를 우대하는 조치로 공장, 기업소에서 받게 되는 생활비는 종전 금액 수준을 새로운 화폐로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

#### 라. 군사 관련

##### ● 노동신문, 한미 ‘국방지침’ 추진 비난(12/30,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 노동신문이 30일 한국과 미국의 국방지침(Defense Guideline) 제정 추진에 대해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노동신문은 ‘모험적 전쟁도발 기도’라는 제목의 개인 논평에서 “미국이 남조선과 조선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미국·남조선 국방지침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는 공동의 전쟁지침 작성으로 우리 인민에 대한 도전이며 노골적 평화파괴 행위”라고 주장
- 신문은 또 “미국은 말로는 조선반도 평화요 뭐니 하지만 뒤에선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 준비를 하면서 정세를 최악의 상태로 몰고 있다”며 “국방지침 추진은 남조선군과 공동작전을 구체화하고 법제화하려는 범죄행위”라고 비난

##### ● 北, 2002년에 이미 우라늄 소량 농축(12/27, 워싱턴포스트)

- 북한이 지난 2002년 무렵 ‘3000개 또는 그 이상’의 원심분리기로 우라늄을 소량 농축하고 있었으며, 농축에 필수적인 가스인 우라늄 헥사플로라이드(UF6·6불화 우라늄) 제조공장은 이미 1990년대에 건설했다는 주장이 나옴.
- 미 워싱턴포스트(WP)는 27일 북한에 핵무기 제조기술을 전수한 인물로 알려진 파키스탄 과학자 압둘 카디르 칸(Khan·73) 박사의 미공개 진술을 근거로 이같이 보도
- 칸 박사는 파키스탄이 적어도 6년간 북한에 우라늄 농축에 관한 핵심 기술과 설계 도면, 기술적인 조언을 제공했다고 주장, 북한은 이에 대한 대가로 국제 거래가 엄격하게 제한된 크리톤 제조법을 파키스탄에 전수한 것으로 알려짐. 크리톤은 핵 기폭장치에 사용됨.
- 칸 박사는 또 1999년 북한 방문 당시 북한이 자체 기술로 건설한 UF6 공장을 둘러봤다고 진술, 그는 당시 어느 산의 터널을 둘러봤는데 현지 안내인이 완성된 핵탄두 부품이 들어있는 상자 3개를 자신에게 보여줬다고 설명, 그는 “그 탄두들은 1시간 안에 미사일에 장착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북한의 UF6 생산능력은 초기에 연간 2t이었다가 이후 연간 10t 규모로 늘었다고 칸 박사는 설명, 북한은 파키스탄에 실험용으로 UF6 1t을 보냈고, 파키스탄도 자국의 샘플을 북한 생산의 표준 모델로 쓰도록 제공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
-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한성렬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지난봄 이전에는 북한이 농축 우라늄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칸 박사와 관련 문제를 논의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고 WP는 보도, 한 대사는 “북한은 미국



정부의 호전성이 매우 높아진 뒤에야 ‘핵 억제책’으로 핵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주장

#### 마. 사회문화 관련

##### ● 北신년맞이 표정(1/1, 조선중앙통신)

- 신년 첫날 북한 주민들은 민속놀이를 즐기고 다양한 음식을 먹으면서 보내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 통신은 “집집마다 떡, 국수, 녹두지짐을 비롯한 민족의 향취가 풍기는 갖가지 음식들을 차려놓고 민족의 슬기가 깃든 장기, 윷놀이 등 오락과 유희로 흥취를 돋구며 즐겁게 쇠고 있다”고 소개
- 평양 시내 주요 음식점들도 분주, 옥류관과 청류관을 비롯해 인민봉사총국 산하 음식점들은 꿩고기 국수, 고기쟁반국수, 메추리 요리, 칠면조 요리, 계사니(거위) 요리 등 다양한 메뉴를 내놓고 있음. 통신은 “새로 개건돼 얼마 전에 문을 연 창광음식점거리에서도 민족음식과 중국, 서양요리를 만들어 봉사하고 있다”며 “중구역, 보통강구역 등 시내의 식당에서도 메밀농마(녹말)국수, 토장국밥, 찰떡, 설기떡, 녹두지짐 등 여러가지 특색 있는 민족음식을 봉사해 명절 분위기를 이채롭게 하고 있다”고 전언
- 김 주석의 시신이 있는 금수산기념궁전과 만수대 언덕의 김일성 동상 등을 찾는 북한 주민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고 통신은 보도
- 북한의 당·정·군 간부들은 1일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참배했으며 김 주석의 입상 앞에는 당 중앙위, 당 중앙군사위,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명의의 화환이 놓여 졌음.

##### ● 北 휴대전화 가입자 8만 명 넘어, 생활상 변화(2010년 1월호, 조국)

- 북한의 3세대(3G) 휴대전화 가입자가 8만 명을 넘어서면서 특권층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휴대전화가 시민들의 일상까지 서서히 바꾸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조국은 ‘평양의 새 풍경, 이동 손전화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휴대전화 보급에 따른 북한의 변화상을 자세히 소개
- 잡지에 따르면 평양 중구역에 위치한 ‘이동 손전화기 판매소’에는 매일 500명 이상 가입신청자들이 몰려 매우 활기찬 분위기를 띠고 있으며 평양에는 현재 2곳의 손전화기 판매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휴대전화 붐이 일면서 ‘자식 걱정’이 유별난 일부 부유층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에게 휴대전화를 사주는 경우도 생기고 있음. ‘조국’ 기사는 “오늘 저녁은 동무들과 공부하다 좀 늦어지겠으니 걱정 마세요”라고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어린이도 목격했다고 전언
- 그런가 하면 IT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북한 주민들이 갑자기 ‘블루투스’ 같은 첨단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쓰다보니 사용법을 잘 몰라 판매점을 찾는 경우도 많으며 휴대전화가 고장났다면 판매소로 들고 오



는 사용자가 적지 않은데 심중팔구는 이런 경우임.

- 북한에서는 통화량만큼 나중에 요금을 내지 않고 매번 선불카드를 구입해 휴대전화를 쓰고 있음.

### ● 김정일, ‘홍루몽’ 제작 직접 지도(12/30, 환구인물; 연합)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북한이 올해 ‘조(북)·중 친선의 해’를 맞아 중국 고전소설 홍루몽을 개작, 가극 ‘홍루몽’을 제작할 때 직접 수십차례 지도를 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짐.
- 김정일 위원장이 2009년 10월 방북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 함께 홍루몽을 관람할 당시, 사회자가 김 위원장이 이 가극을 잘 만들라고 특별히 지시하는 한편 직접 수십차례 제작 지도를 했다고 밝혔다고 인민일보 자매주간지인 환구인물(環球人物)이 12월 하순호에서 보도
- 김 위원장은 또 대학 재학생이나 막 졸업한 신인들이 홍루몽의 주연에 발탁된 데 대해 가극중 인물의 이미지에 맞게 배역을 잘했다고 평가하고 이는 노동당이 예술계 후계자들을 제대로 육성하고 있음을 설명해준다고 치하했다고함.
- 한편 중국은 북한의 가극 홍루몽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11월 전문가 4명을 평양에 파견, 무대장치, 미술, 의상, 무용동작 등을 지도했다고 주간지는 보도
- 김정일 위원장은 2008년 4월 조중친선의 해를 앞두고 피바다가극단에 가극 홍루몽을 다시 만들라고 지시, 북한은 고 김일성 주석이 1961년 중국 방문중 가극 홍루몽을 관람하고, 이어 상하이 월극(越劇)단이 이해 가을 방북해 홍루몽을 공연한 것을 계기로 김 주석의 지시로 창극 형태로 홍루몽을 제작했었음.

### ● 北소설문단 성과는 젊은 작가 약진(2009년 12월호, 조선문학)

- 북한의 월간 문학잡지 ‘조선문학’ 12월호는 올해 북한 소설문단의 주목할 만한 성과로 30~40대 젊은 작가들의 약진을 꼽음.
- 잡지는 연말 결산 기사에서 “올해 소설문단의 특기할 성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30~40대 젊은 작가들이 자기의 뚜렷한 얼굴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한 뒤 ‘자기의 뚜렷한 얼굴’에 대해 “소설작품에서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숨결을 체현한 전형적이고 개성적인 성격 창조, 새롭고 독특한 구성 수법, 특이한 자기 나름의 문체 등을 들 수 있다”고 설명
- 잡지는 눈에 띄는 젊은 작가 작품으로 단편소설 ‘가시오갈피’(김홍철), ‘세월은 흘러도’(백명길), ‘내 고향은 아름답다’(김홍균), ‘나래를 퍼덕이라’(김경일) 등을 지목하고 “문단에서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들”이라고 평가
- 잡지는 또 장편소설 ‘행복의 기초’, ‘불타는 여명’, ‘내고향의 봄’, ‘바다 사나이’, ‘연륜’, ‘북두칠성’과 시 ‘불세출의 탄생’, ‘6월19일’, ‘어머님 추



역, '상봉', '우리의 별이 빛난다' 등을 우수작으로 분류

### ● 北, 신종플루 긴급대상 11호 지정(11/28, 연합)

- 북한은 최근 신종플루 사망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치료후 재발 환자까지 급증하자 이른바 '11호' 긴급조치를 발동, 전시 상황에 준해 신종플루 환자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대북인권단체 '좋은벗들'(이사장 법륜 스님)이 28일 밝힘.
- 법륜 스님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09 북한사회동향 보고회"에 발표자로 나서 "과거 북한은 전쟁과 같은 극한상황에서 가장 치료가 급한 부상병이나 세균감염자를 11호 대상자로 분류해 특별관리했다"면서 "이번 신종플루의 전염 속도와 위험성을 의식해 11호 조치를 취한 것 같다"고 설명
- 그는 북한내 소식통을 인용, "11호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아무 교통수단이나 임의로 세울 수 있고 거부하면 행정처벌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는다"며 "일례로 북한은 6.25 전쟁 당시와 2002년 서해교전 때 부상병들을 11호 대상자로 처리한 바 있다"고 설명
- 그는 또 "북한의 이번 신종플루는 중국 단둥(丹東)을 거쳐 전파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11월에만 신의주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등 40여명이 사망했고 현재는 북한 전역에 확산돼 교화소 면회까지 금지된 상황"이라고 소개

## 2. 대외정세

### 가. 북·미 관계

#### ● 美, 로버트 박 사건, 안보·정치문제와 무관(12/30, 연합)

- 미국은 30일 인권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북한 국경을 무단으로 넘어갔다가 억류된 대북 인권운동가 로버트 박씨 문제가 6자회담 재개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힘.
- 미 국무부는 연합뉴스의 관련 질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안보나 정치적인 어떤 문제와도 관계가 없는 영사적 문제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힘. 국무부는 이어 북한주재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 박씨에 대한 영사적 접근을 여전히 추진중이라고 소개
- 앞서 국무부는 29일 성명을 통해 "북한 정부가 조사를 할 때까지 미국 국민 1명을 억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박씨 면담 추진 방침을 밝혔음.

#### ● 美, 뉴욕채널로 北과 로버트박 논의(12/30,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정부가 무단 입북한 재미교포 인권운동가 로버트 박(28)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뉴욕 채널로 북한과 논의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



송(RFA)이 국무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30일 보도

- 이 관리는 RFA에 “(북한이) 박씨를 억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면서 “뉴욕 채널에서 북한 측과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
- 미 국무부는 또 28일(미국 시간) 샌디에이고에 사는 박씨 가족과 연락해 박씨의 입국 경위와 배경을 조사했다고 RFA는 전언

#### ● 美, 억류 로버트 박 면담 추진(12/30, 연합)

- 미국은 29일 인권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무단 입북했다가 북한 당국에 억류된 미국 국적의 대북 인권운동가 로버트 박씨에 대한 면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북한 정부가 조사를 할 때까지 미국 국민 1명을 억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언급
- 그는 “우리는 평양에서 우리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는 (북한주재)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 이 미국인에 대한 영사적 접근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미국은 그러나 북한과의 직접 접촉에서 북한의 로버트 박 억류 사실을 확인했는지 여부는 정확히 밝히지 않음.
-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12월 24일 미국 사람 한 명이 조중 국경지역을 통하여 불법 입국해 억류됐으며 현재 해당 기관에서 조사중에 있다”고 로버트 박 억류 사실을 공식 확인

#### ● 北, ‘평화협정 체결이 우선’ 美에 전달(12/28, 교도통신)

- 북한은 현재의 정전협정을 대신할 항구적인 평화협정 체결이 북·미 관계정상화보다 중요하다는 뜻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북·미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이 28일 보도
-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이 소식통은 12월 8~10일 미국의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평양을 방문해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을 비롯한 북한의 고위 관리들을 만났을 당시 북한 측에서 “외교관계는 언제라도 깨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언
- 북한 측은 또 “우리는 당분간 (미국과 관계정상화에) 관심이 없다”면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이 소식통은 전언
- 북한 관리들은 아울러 미국의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와 경제지원, 외교관계 정상화 등 조건부의 포괄적인 접근법에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면서 “관심이 있을 때”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있다”고 언급, 이들은 거듭 “미국이 적대시 정책과 같이 (북한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비핵화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
- 소식통은 이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보즈워스 대표를 통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한 친서에서 평양 연락사무소를 제안하지는 않았으며 6자회담 복귀와 비핵화 조치를 촉구했다고 전언





## 나. 북·중 관계

### ● 中, 김정일 방중설 들은 바 없다(12/31, 연합)

- 중국 외교부는 31일 최근 나돌고 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입박설을 우회적으로 재차 부인, 장위(姜瑜)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2010년 초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의 진위를 확인해 달라는 요구에 “현재까지 그런 방면의 정보를 들은 바 없다”고 언급
- 한편 장 대변인은 재미교포 대북 인권운동가의 입북 사건과 관련, “미국과 북한이 적절하게 사건을 처리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란 큰 흐름을 유지하길 희망한다”고 언급

### ● 北외무성 부상, 북-중 우호 불변 과시(12/29, 연합)

- 김영일 북한 외무성 부상은 28일 “올해 북한과 중국은 일련의 행사를 통해 양국의 우호관계를 전 세계에 과시했다”고 언급
- 김 부상은 이날 평양의 중국대사관에서 열린 송년 리셉션에서 북-중 관계를 심화, 발전시켜 나간다는 게 북한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힘. 이에 대해 류샤오밍(劉曉明) 주북 중국대사도 북-중 우호의 해인 2009년에 열린 행사들은 양국 국민의 우정과 이해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화답

## 다. 북·일 관계

### ● 북·일 비밀접촉, 북측 제의로 성사되(1/3, 연합)

- 2009년 여름 이후 중국 베이징(北京)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진행된 일본 민주당과 북한간 비밀접촉은 북한의 제의로 성사된 것으로 3일 알려짐. 또 북한은 이 자리에서 과거에도 제의한 이른바 ‘적군파 추방’ 문제를 타진했을 가능성이 크며, 일본인 납치문제 등 현안에 대해 양측은 입장을 조율했으나 구체적인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북수의 외교 소식통은 전언
- 일본 측은 적군파 문제에 대해 ‘북한이 보호 중인 자국민 적군파 요원을 추방하면 국내법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알려짐.
- 한 소식통은 “북·일접촉은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접촉이라기보다는 일본 민주당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아직 주요 현안에 있어 실질적인 성과는 없다고 들었으며 북한의 진정성이 확인되면 일본 정부 또는 정치권에서 후속 접촉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 그는 “현재는 북한에서 만나자고 하니 일본 민주당 측에서 그 진의를 파악하는 단계”라고 설명



### 3. 대남정세

#### ● 북, 개성공단 실무회담 조기개최 강력 희망(1/3, 연합)

- 북한은 2009년 12월 12~22일 남북한 합동으로 진행한 중국, 베트남 공단 시찰때 개성공단 현안 협의를 위한 실무회담의 조기 개최를 강력하게 희망했던 것으로 3일 알려졌다.
-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등 북측은 시찰 과정에서 임금 문제, 근로자 숙소 및 출퇴근 도로 건설, 작업장 환경 개선, 3통(통행, 통관, 통신) 해결 등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 회담을 조기에 개최하자는 뜻을 남측 시찰단에 전달
- 북측 단원들은 역류 근로자 유성진씨 석방, 통행제한 조치 해제, 해외 공단 합동시찰 등 남측이 제기한 개성공단 관련 요구들을 대부분 수용한 만큼 실무회담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 사항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측으로부터 공식적으로 개성공단 실무회담 개최 제의가 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측의 정식 제의가 있으면 실무회담 개최를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 ● 개성공단 10여 개사 70만 달러 임금체불(1/2, 연합)

- 개성공단 입주업체 및 건설업체 중 10여 개사의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에 정통한 소식통은 2일 “작년 11월말 기준으로 입주업체 10곳과 현지 건설업체 3곳의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총 체불임금 액수는 약 70만 달러 정도”라고 설명
- 업체별 체불 임금 규모는 적게는 수 백 달러, 많게는 16만 달러 가량이나 되며, 초기 입주업체인 S사 등 10만달러 이상 밀린 업체가 4곳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소식통은 전언
- 개성공단 관계자는 “단기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액 체불업체들은 큰 문제가 없으나 체불기간이 긴 일부 업체들은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언
- 북측은 2009년 12월 12~22일 중국, 베트남 공단에 대한 남북 합동시찰 때 개성공단 일부 업체들의 임금 체불 문제를 제기한 바 있음.
- 정부 관계자는 “북측 공단관리 당국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입주업체들로부터 근로자 임금을 달러로 일괄 수령한 뒤 근로자에게 생필품 쿠폰과 현금(북한돈)을 나눠주는 식이기 때문에 임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총국이 자체적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을 보장해줘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고 소개
- 북한이 우리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만든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과 ‘노동세칙’에 따르면 북측은 입주 기업이 30일 이상 근로자 임금을 체불할 경우 벌금 100~2천달러 또는 영업 중지 처분을 내릴 수 있음. 그러나 북한 당국은 이 같은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지는 않고 있는 것



으로 알려짐. 현재 개성공단에서는 120여개 입주 업체들이 북한 근로자 4만여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남북 간 합의에 따른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월 최저 임금은 57.881달러(사회보험료 제외)임.

#### ● 北민화협, 남북협력제주본부에 새해 메시지(12/31, 연합)

- 사단법인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이사장 강영석)는 북한민족화해협의회(회장 김영대)가 31일 오전 팩스로 새해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밝힘.
- 민화협은 메시지에서 “6.15공동선언 10돌이 되는 뜻깊은 새해를 맞아, 남북협력 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운동본부에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도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사업에 새로운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이 메시지는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와 제주도가 1999년부터 지속해 온 감귤 북한 보내기사업이 중단되지 않길 바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임. 북한민족화해협의회는 감귤 북한 보내기사업이 시작된 이후 해마다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에 신년 메시지를 보내오고 있음.

#### ● 개성공단직원 ‘사전등록제’ 2010년 시행(12/30, 연합)

- 정부는 개성공단 직원으로 신분을 속여서 방북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신원을 전산화해 관리하는 ‘사전 등록제’를 시행할 방침임.
- 정부 당국자는 30일 “수시로 북한을 왕래하는 개성공단 관계자들의 명단과 신상 정보를 미리 전산 시스템에 등록한 뒤 방북 신청이 들어오면 등록된 명단과 대조하는 방안을 2009년 초부터 정식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
- 그는 “만약 전산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개성공단 관계자라며 방북을 신청할 경우 입주기업의 재직증명 서류 등을 제출하게 하는 방식으로 신분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
- 이와 관련, 정부는 최근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로부터 직원 명단을 제출받았으며, 전산 시스템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수작업으로 방북 신청자와 등록 직원 명단을 대조할 계획이라고 정부 소식통들이 전언
- 경기 파주시의회 의원 4명은 지난 10월 개성공단 입주기업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방북 신고서를 작성해 통일부의 승인을 받은 뒤 사실상 관광 일정으로 개성을 방문하고 돌아와 물의를 빚었음.

#### ● 북, 경수로 장비·자재 무단 반출(12/30, 중앙일보)

- 북한이 4년 전 건설이 중단된 함경남도 금호지구(신포시 일대) 한국형 경수로의 현장에 보관 중이던 우리 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무단 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중앙일보가 30일 보도
- 신문에 따르면 통일부와 관계 당국은 북한이 금호 지구에서 최근까지 트럭·버스 등 모두 190대의 차량을 빼내간 것으로 보고 있음. 또 크레



인과 굴착기 등 북한에 넘어갈 경우 군사용 등으로 전용될 수 있어 정부가 전략 물자에 준해 관리해오던 중장비 93대도 가져갔고, 6500t의 철근과 32t의 시멘트도 대부분 반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 이 물품은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계획(HEUP)으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경수로 사업이 종료되면서 건설 현장에 남겨 놓은 것임. 1997년 8월 착공을 시작한 대북 경수로 건설 사업은 공정률 34% 상태였던 2005년 말에 완전 중단됐음. 정부는 그동안 공사비 15억 6200만 달러 중 11억3700만 달러를 냈었음.
- 신문은 북한의 무단 반출이 북한과 KEDO 간 합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 또 “2006년 10월과 지난 5월 북한의 핵 실험 때 경수로에서 빼낸 자재·장비가 이용됐다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됐다”는 한 당국자의 말을 빌어, 정부가 이를 감춰왔다고 강조

#### ● 연탄나눔 운동, 北에 ‘사랑의 연탄’ 5만 장 전달(12/29, 연합)

-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부천시부는 영하 15도 안팎의 매서운 추위를 보인 29일 오전 북한 개성지구에 연탄 5만장을 전달, 부천 연탄나눔운동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연탄을 25t 트럭 8대에 나눠 싣고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개성으로 들어갔음. 이날 연탄 전달은 개성지구로 가는 올해 마지막 행사로, 30일 금강산지구에 연탄 5만장을 전달하면 올해 북한과 합의한 50만장을 모두 전달하게 됨.

#### ● 대북인도적지원 기금 260억 원 의결(12/28, 연합)

- 정부는 28일 국제기구와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에 쓸 남북협력기금 약 260억원을 의결, 통일부는 “오늘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를 통한 북한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에 남북협력기금 약 26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 이와 관련,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북한 영유아 지원 사업에 약 1천300만 달러, 유니세프의 영유아 대상 영양 개선 및 예방백신 제공 사업에 약400만 달러를 각각 지원, 또 ‘우리민족서로돕기’, ‘한국제이티에스’ 등이 추진하는 북한 영유아용 영양식과 분유, 필수 의약품 지원 등에 35억 원, ‘겨레의 숲’의 병충해 방제 등 북한 산림녹화 사업에 약 20억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북한 기초 의약품 생산지원 등에 5억 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음.
-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번 지원은 북한의 인도적인 상황과 취약계층 지원의 시급성, 국제기구와 민간단체의 지원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했다”며 “이로써 올해 대북지원 사업과 관련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액수는 총 500억 원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



## II. 동북아정세

### 1. 대북한 관련

####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 “6자회담, 구정前 재개 가능성 낮아”(12/31)

- 정부 고위당국자는 31일 북핵 6자회담 재개시기와 관련, “내년 구정(2월14일) 이전에 회담이 재개될 개연성이 적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연말 연시에 여러 일정과 행사들이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전망했음. 그는 이어 “회담재개 시기는 구정 이후일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로서는 언제 개최된다고 구체적으로 판단할만한 근거가 없다”고 말했음.
- 이와 관련,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30일 기자들에게 “6자회담 참가국들간 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6자회담을 조속히 열어야 한다”거나 ‘안 열리면 동력을 잃는다’는 등의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다”고 밝혔음.
- 이 당국자는 또 6자회담 재개 이전 북·미 추가대화 가능성에 대해 “추가 대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반대하지는 않지만 무한정 계속되거나 늘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음. 이 당국자는 특히 “추가 대화가 있더라도 곧바로 구체적이고 생산적인 결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그는 뉴욕채널을 통한 북·미간 접촉에 대해 “아직 특별한 게 없는 것으로 보이며 현재로서는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음. 그는 북한이 취해야할 불가역적 조치의 내용과 관련, “현재 실무선에서 많은 옵션들이 검토되고 있다”며 “6자회담 복귀만으로는 비핵화의 진전으로 보기 어려우며 예를 들어 (영변 핵시설 등에 대한) 작동중단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 ● 中전문가 “美, 내년에도 북핵문제 중시”(12/31)

- 미국이 내년에도 여전히 북핵 문제를 중시할 것이라고 중국의 국제문제 전문가가 전망했음.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마샤오쥘(馬小軍) 교수는 30일 중국신문사와 전문가 대담을 갖고 “동아시아 문제에서 미국의 중점 현안은 여전히 북핵 문제”라면서 이같이 전망했음.
- 마 교수는 그러나 “올해 북핵 문제는 어떤 진전도 이루지 못해 어두운 상태로, 어떠한 고무적인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다”면서 “6자회담의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음. 중국 전문가들은 2010년 한해가 21세기의 두 번째 10년을 여는 해로서 향후 국





제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음.

- 류장용(劉江永) 칭화(淸華)대 국제문제연구소 교수는 대담에서 “21세기의 두 번째 10년을 시작하는 2010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한해”라면서 주목해야 할 분야로 ▲ 세계경제의 회복 여부 ▲ 국제정치 지형의 변화 ▲ 테러가 기승을 부리는 중동과 남아시아의 정세 ▲ 내년도에 숙제를 안겨준 기후변화 문제 등을 꼽았음.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2010년은 경제위기와 국제정치 분야, 테러 안보 문제, 기후변화 등 각종 국제문제에서 불확실성이 매우 큰 한해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음.
- 마 교수는 “2010년의 미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대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전략의도가 순조롭게 달성될 지에 대한 회의가 여전한 데다 코펜하겐 기후회의에서 드러난 각국의 갈등도 첨예했다”며 내년에는 각종 분야에서 불확실성이 크게 대두될 것이라고 말했음. 그는 “지난 25일 미국에서 발생한 여객기 테러 사건이 상당한 함의를 갖고 있다”며 “테러 용의자는 전형적인 테러리스트와 달리 부잣집 출신에 서방에서 교육받은 사람이었지만 이슬람 극단주의 사상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말했음.
- 마 교수는 “테러가 기승을 부릴수록 테러 방지와 척결을 위한 조치도 강화될 것”이라면서 무력 사용은 테러 방지를 위한 완전한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슬람과 서방이 지속적으로 상생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조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 ● 柳외교 “6자회담 참가국간 조속재개 협의 중”(12/30)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30일 “6자회담 참가국들 간 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음. 유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힌 뒤 “6자회담을 조속히 열어야 한다”거나 ‘안 열리면 동력을 잃는다’는 등의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다”고 소개했음. 그는 “보즈위스 특별대표가 북한에 다녀오고 나서 지금은 북한 측의 반응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6자회담이 열리게 된다면 “중국이 워낙 보안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임박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음.
- 유 장관은 성탄절을 기해 무단입북했다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로버트 박씨와 관련, “미국이 평양의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 영사 면담을 하고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것”이라며 “북한이 (박씨를) 추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간단한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말했음.
- 그러면서 그는 “박씨 문제가 6자회담이나 북핵 문제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음.
- 유 장관은 “내년 11월엔 G20 정상회의가 있고 한·중·일 정상회의는 5월 하순 제주도에서 여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상설사무국 설치를 합의할 생각”이라고 말했음.



### ● 러-일 외무 “6자회담外 대안 없다”(12/29)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8일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들이 이전보다 조금 개선됐다”면서 “북한과의 6자회담 재개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모스크바를 방문한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일본 외상과 회담한 후 기자회견에서 “6자회담 재개 조건들이 이전보다 조금 나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북핵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6자회담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으며 모든 문제가 6자회담 틀 내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는 또 “러시아나 일본 등 일부 관련국들이 북핵 협상 과정에서 제외되리라 기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리는 현재 일본을 비롯한 당사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이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라브로프 장관의 이런 언급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해 비핵화 조치를 재개하면 일본과 러시아를 제외한 상태에서 남북한과 중국, 미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이 가동될 수도 있다는 일부의 관측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됨.
- 오카다 외상은 “북한이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6자회담으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북한과 핵문제는 물론 일본인 납치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싶다고 밝혔다.
- 라브로프 장관과 오카다 외상은 그러나 내년에 북한이 새로운 장거리 미사일 또는 핵무기를 생산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라브로프 장관은 일본과 러시아가 마찰을 빚고 있는 북방 영토 문제와 관련, “양국이 조용하고도, 호의적인 분위기 속에 상호 수용할만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양국이 건설적 대화를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라브로프 장관은 “소위 ‘표준’에 맞지 않는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오카다 장관도 영토 문제에 대한 양국 간 인식의 차를 인정하면서 “구체적 결과를 얻기 위한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카다 외상은 지난 24일 러시아 언론과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북방영토 문제 해결을) 무기한 연기하려 해 일본 국민이 불신을 품고 있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일본-러시아 파트너십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음. 일본은 러시아에서 남(南)쿠릴열도로 불리는 에토로후(擇捉), 구나시리(國後), 하보마이(齒舞)와 시코탄(色丹) 등 4개 섬을 놓고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음. 이 4개 섬은 1905년 러-일 전쟁의 승리로 일본이 차지했다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하고 러시아가 실효 지배해 오고 있음. 이 문제로 종전 50년이 넘었지만, 양국은 아직 공식적으로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음.
- 양국 모두 경제적으로 중요한 상대지만 지하자원이 풍부해 경제적 가치가 높고 태평양에 접한 전략적 요충지라는 점에서 북방 영토에 대해서 만큼은 한 치의 양보 없는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음.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정권 출범 후 양국 정상은 2차례 만나 북방영토



문제를 논의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했음.

### ● 러 외무 “6자회담 재개 조건 전보다 성숙”(12/28)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8일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들이 이전보다 크게 성숙해 있다”면서 6자회담 재개에 강한 기대감을 표시했음.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모스크바를 방문한 오카다가쓰야(岡田克也) 일본 외상과 회담한 후 기자회견에서 “6자회담 재개 조건들이 이전보다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핵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6자회담 외에 다른 대안은 없으며 모든 문제가 6자회담 틀 내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러시아나 일본 등 일부 관련국들이 북핵 협상 과정에서 제외되리라 기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리는 현재 일본을 비롯한 당사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이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음.
- 이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해 비핵화 조치를 시작하면 일본과 러시아를 제외한 남북한과 중국, 미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4자회담이 가동될 수 있다는 일부의 지적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됨.
- 이와 함께 라브로프 장관은 일본과 러시아가 마찰하는 북방영토 문제와 관련, “양국이 조용하고도, 호의적 분위기 속에 상호 수용할만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양국이 건설적 대화를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음. 그러면서 라브로프 장관은 “소위 ‘표준’에 맞지 않는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말했음.
- 오카다 장관도 영토 문제에 대한 양국 간 인식의 차를 인정하면서 “구체적 결과를 얻기 위한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오카다 외상은 지난 24일 러시아 언론과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북방영토 문제 해결을) 무기한 연기하려 해 일본 국민이 불신을 품고 있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일본-러시아 파트너십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음.
- 일본은 러시아에서 남(南)쿠릴열도로 불리는 에토로후(擇捉), 구나시리(國後), 하보마이(齒舞)와 시코탄(色丹) 등 4개 섬을 놓고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음. 이 4개 섬은 1905년 러·일 전쟁의 승리로 일본이 차지했다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하고 러시아가 실효 지배를 해 오고 있음. 이 문제로 종전 50년이 넘었지만, 양국은 아직 공식적으로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일본 정부가 지난달 “북방영토가 불법 점거되고 있다”고 밝히자, 러시아는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수정하려는 시도로 받아들여졌다”고 불만을 표시했음. 러시아는 평화조약 후 2개 섬은 돌려줄 수 있지만, 일본은 4개 섬 모두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음.



● “北 2002년 소규모 우라늄 농축” <칸 박사> (12/28)

- 북한에 핵기술을 넘겨준 것으로 알려진 파키스탄의 압둘 카디르 칸 (73) 박사는 워싱턴포스트(WP)가 입수해 28일 공개한 문건에서 북한이 2002년까지 “3천기 또는 그 이상”의 원심분리기를 이용해 소규모 우라늄을 농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칸 박사는 또 북한이 1990년대 우라늄 농축을 위한 가스 생산시설을 건립했으며 이는 핵무기 제조를 위한 제2의 길을 찾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파키스탄이 최소 6년간 북한에 핵심 기기와 도면, 기술적 조언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지만 가스 생산시설은 자체적으로 만들었다고 전했다.
- 또 북한의 우라늄 헥사플로라이드(UF6) 생산능력이 초기 연간 2t에서 10t 규모로 늘었다면서 북한이 파키스탄에 실험용으로 1t을 제공했고, 파키스탄은 북한의 생산표준을 위해 자국의 가스를 전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우라늄 헥사플루오라이드는 천연 우라늄 농축에 필수적인 물질로 원심분리기에 넣어 돌리면 발전소나 무기에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을 얻을 수 있음.
- 이에 대해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의 한성렬 차석대사는 북한이 지난 봄 이전 우라늄 프로그램을 갖지 않았고 이 문제를 칸 박사와 논의한 적도 없다면서 북한은 지난 4월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극심한 단계에 접어들 이후에야 “핵억지” 수단으로 우라늄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칸 박사의 말을 당장 확인할 수는 없음.
- 그러나 미국의 정보 관리와 외교관들은 이에 대해 북한이 오랫동안 무기용 플루토늄과 함께 우라늄 농축에 나섰다라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주장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북한은 지난 9월 유엔 주재 상임대표의 이름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라늄 농축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고 주장하기도 했음. 칸 박사는 아울러 북한과 파키스탄의 과학자들이 약 10년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면서 일례로 자신이 1999년 북한을 찾았을 때 산속 비밀 터널을 방문했다고 말했다.
- 그는 당시 북한 측이 터널에서 뇌관과 점화장치 등 핵탄두 3개를 만들 수 있는 부품을 보여주면서 1시간 내 조립해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 칸 박사의 주장과 관련, 북한 핵시설을 직접 둘러본 경험이 있는 지그프리드 헤커 전 로스 알라모스 미국립핵연구소장은 북한이 1999년 핵탄두를 만들 정도의 핵분열 물질을 보유하고는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며 의문을 표했다. 워싱턴에 있는 파키스탄 정부 관리들은 칸 박사의 주장이 근거 없다면서 파키스탄은 핵확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음. 칸 박사는 2003년 12월 핵확산 스캔들로 체포돼 현재 가택연금 상태임.





## 나. 미·북 관계

### ●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10일 방한(1/3)

- 비릿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인권 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차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방한할 예정이라고 외교 소식통들이 3일 전했다. 이번 방한은 최근 미국국적 인권운동가인 로버트 박씨가 자진 입북하고 로버트 킹 미국 대북인권특사가 11일 방한할 예정인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고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방한기간 탈북자 정착지원기관인 하나원을 방문, 북한 이탈주민들을 인터뷰하고 외교부, 통일부, 비정부기구(NGO) 관계자들과 면담할 예정이다. 그는 방한기간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 인권보고서를 작성,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는 북한을 직접 방문하는 방안도 추진해왔으나 북한이 내정간섭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와 관련,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달 9일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린 보편적 정례검토(UPR) 회의에서 북한측에 문타폰 특별보고관의 조사와 접촉을 허용하라고 권고했으나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직은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검토와 보고를 목적으로 2004년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로 설치됐다.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2005년, 2007년, 2008년 한국을 방문한 바 있으며 오는 6월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음.
- 한편 북한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대북인권특사는 북한 관련국 순방차 11일 방한할 예정이며 조만간 북한 방문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 ● NYT, 납북자 가족모임 활동 소개(1/3)

- 미국 뉴욕 타임스(NYT)가 2일 납북자 가족모임 최성용 대표의 인생스토리를 토대로 납북자 문제에 대한 조명을 시도했음. NYT는 이날 주말판 특집에서 부친의 납북과 이에 따른 고통에서부터 납북자 가족모임을 결성해 납북문제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고, 북한에 있던 납북자들을 탈북시켜 입국시킨 사연 등 최씨의 인생역정을 자세히 소개했음.
- 최씨의 부친 최원모 씨는 어선 ‘풍복호’ 선주로 40여 년 전인 1967년 6월 배를 타고 서해 연평도로 나갔다가 납북된 후 소식이 끊겼음. 유복했던 그의 가족은 부친의 납북 후 부친이 소유하고 있던 배와 집을 뺏기고 ‘납북자의 아들’이라는 주위의 시선과 연좌제로 고통을 받아야 했음.
- 최씨는 2000년에야 부친이 1970년 북한에서 처형됐다는 소식을 한 탈북자로부터 전해 들었고, 이후 납북자가족모임을 결성해 활동해 왔음. 최 대표는 이 모임을 통해 2007년 최욱일 씨 등 5명의 납북자를





탈북, 입국시켰고, 북한과 중국에 있는 정보망을 통해 130여 명의 납북자 생사를 확인하는 등 납북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해 왔음.

- 이에 대해 최씨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저의 활동은 정말 외로운 싸움의 연속이었다”고 회고했음.

#### ● 美언론 “北신년사설 희망적 신호일수도”(1/1)

- 미국 언론은 1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 실현 등을 강조한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과 관련 “북한이 6자회담으로 돌아온다는 희망적인 신호일 수도 있다”고 평가했음.
- CNN방송은 새해 첫날 아침뉴스에서 북한의 공동사설 내용을 비중있게 보도하면서 “북한은 작년에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 이후 경제난 해소와 외교적 고립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필사적”이라는 한반도 분석가들의 지적을 예로 들며 이같이 전했다.
- AP통신도 “북한이 신년사설에서 ‘핵 없는 한반도’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함으로써 핵무기 프로그램 종식을 위한 6자회담에 복귀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밝게 했다”고 내다봤음.
- 그러나 뉴욕 타임스는 서울발 기사에서 “북한은 이번 사설에서 지금까지와 달리 미국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호전적 공격을 완화했다”면서 “북한이 미국과의 ‘호전적 관계’를 종식시키겠다고 밝힌 것은 6자회담의 초점을 재조정하겠다는 시도로 읽혀진다”고 지적했다. 뉴욕 타임스는 “북한은 6자회담에 다시 돌아오기 전에 미국과의 긴장완화, 평화체제 구축, 비핵화의 수순을 밟겠다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주장은 핵무기 해체에 쏠린 초점을 분산시키려는 계략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음.

#### ● “국제사회, 작년 北에 4천만\$ 지원”<RFA>(1/1)

- 작년 한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총액은 전년보다 다소 줄어든 4천60여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일 보도했음. 유엔 인도지원조정국 대변인은 RFA에 “2009년 한국과 유럽국가 등이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의 식량, 의료, 농업, 식수 개선 사업 등에 4천60여 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음.
- 작년 북한은 국제사회에 별도의 지원 요청을 하지 않았지만 세계식량계획(WFP)의 긴급구호 사업, 세계보건기구(WHO)의 병원 보수 및 의료 지원 사업, 유엔아동기금(UNICEF)의 식수·상하수도 개선 사업 등이 진행됐음. 그러나 작년 지원액은 2008년의 4천800만 달러에 비하면 16% 감소했고, 지원국 또한 14개에서 10개로 줄었다고 RFA는 전했다. 또한 목표액의 절반도 채 모금되지 않아 유엔 긴급구호기금(CERF)이 작년 총 대북 지원의 절반에 가까운 1천900만 달러를 지원함으로써 북한은 짐바브웨와 함께 긴급구호기금의 최대 수혜국이 됐다고 방송은 소개했음.





락해 박씨의 입국 경위와 배경을 조사했다고 RFA는 전했다.

- 한편 이언 켈리 미 국무부 대변인은 29일(현지 시간) 성명에서 “북한 정부가 미국 국민 1명을 억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평양에서 우리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는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 이 미국인에 대한 접근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박씨 입북 닷새 만인 29일 “미국 사람 한 명이 12월 24일 조중 국경지역을 통하여 불법 입국해 억류됐으며 현재 해당 기관에서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 ● 美 “억류 로버트 박 면담 추진”(12/30)

- 미국은 29일 인권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무단 입북했다가 북한 당국에 억류된 미국 국적의 대북 인권운동가 로버트 박씨에 대한 면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 정부가 조사를 할 때까지 미국 국민 1명을 억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평양에서 우리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는 (북한 주재)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 이 미국인에 대한 영사적 접근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그러나 북한과의 직접 접촉에서 북한의 로버트 박 억류 사실을 확인했는지 여부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 ● “北, ‘평화협정 체결이 우선’ 美에 전달”(12/29)

- 북한은 현재의 정전협정을 대신할 항구적인 평화협정 체결이 북·미 관계정상화보다 중요하다는 뜻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북·미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이 28일 전했다.
-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이 소식통은 지난 8~10일 미국의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평양을 방문해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을 비롯한 북한의 고위 관리들을 만났을 당시 북한 측에서 “외교관계는 언제라도 깨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 북한 측은 또 “우리는 당분간 (미국과 관계정상화에) 관심이 없다”면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 북한 관리들은 아울러 미국의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와 경제지원, 외교관계 정상화 등 조건의 포괄적인 접근법에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면서 “관심이 있을 때”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거듭 “미국이 적대시 정책과 같이 (북한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비핵화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 소식통은 이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보즈워스 대표를 통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한 친서에서 평양 연락사무소를 제안하지는 않았으며 6자회담 복귀와 비핵화 조치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 한편 한국 정부 소식통들은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 후 전언에서 북·미 양국이 6자회담 재개 시 남·북·미·중 4자대화를 가동해 평화협정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논의하기로 양해했다고 말했다.
- 또한 보즈워스 대표는 평양을 방문한 후 10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자회담 당사국들은 한반도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언젠가 대체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6자회담이 재개되면 비핵화에 대한 논의에 추진력이 생기고, 우리 모두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할 준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그의 방북에 앞서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지난 2일 “북미 양자대화의 최대 현안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이라며 “조(북)·미 회담에 임하는 조선 측의 최대 관심사는 항상 평화이며 그 외의 잡다한 문제는 주된 의제로 상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 “北 망하게 내버려 뒀라” <美전문가>(12/28)

- 북한이 최근 단행한 화폐개혁으로 전례 없는 내부 반발에 직면해있으며 ‘이번에 진짜로 붕괴할지 모른다’는 경고가 나왔음.
- 보수 성향의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대니얼 블루멘탈 선임연구원과 레슬리 포가흐 연구원은 28일 보수지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6자회담 재개 노력이 ‘실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 이들은 김정일-정은 부자가 화폐개혁으로 인해 인민들과의 선을 ‘최종적으로’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면, 화폐개혁으로 그동안 모은 것들을 잃어버린 대중들이 분노하고 있으며 김정일 체제가 인민보안상을 중국에 긴급 파견한 것은 주민들의 대량 월경을 막기 위한 것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들은 또 폭동 그 자체보다는 오히려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불만에 직면해 화폐 교환 정책을 일부 완화한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하면서 당국의 부분적인 반복조치로 주민들의 불만을 일부 진정시킬 수는 있으나 이를 통해 주민들은 추가 투쟁의 여지를 남겨두게 됐다고 전망했다. 주민들의 항의와 최소한 1천800만 달러의 손실을 안겨준 국제제재 조치, 그리고 후계체제의 불확실성 등 김정일 체제가 “이번에는 정말로 자금난에 봉착해있으며 통제력을 상실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들은 덧붙였다.
-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는 그를 구제하기보다 망하도록 내버려 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는 오히려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궁극적인 통일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일부는 절박한 상황에 처한 김정일 정권이 이번에는 진짜로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할지 모르나 역사적으로 볼 때 망해가는 정권이 지속성 있는 양보를 내놓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 우크라이나와 남아공에서 성공적인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지원과 정통성을 희망하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연후에야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





과 미국은 북한의 붕괴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개선해오고 있으나 아직 충분치 않다면서 특히 일본과의 협조 개선이 핵심이라고 이들은 주장했음. 일본은 한반도의 미래에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으며 특히 북한에 중국의 꼭두각시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는 것임.

#### 다. 중·북 관계

##### ● 中 “김정일 방중설 들은 바 없다”(12/31)

- 중국 외교부는 31일 최근 나돌고 있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 임박설을 우회적으로 재차 부인했음. 장위(姜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내년 초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의 진위를 확인해 달라는 요구에 “현재까지 그런 방면의 정보를 들은 바 없다”고 말했음. 장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도 진위 확인 요청에 같은 대답을 했었음. 최근 김정일 위원장의 방북설은 일본 언론을 중심으로 계속 나오고 있음.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은 21일 김 위원장이 내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중국을 방문,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음. 이어 아사히(朝日)신문도 31일 김 위원장이 빠르면 내년 1월 초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음.
- 한편 장 대변인은 재미교포 대북 인권운동가의 입북 사건과 관련, “미국과 북한이 적절하게 사건을 처리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란 큰 흐름을 유지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음. 재미교포 대북 인권운동가 로버트 박씨는 지난 24일 중국에서 두만강을 건너 무단 입북했으며 북한 중앙통신은 29일 박씨의 억류 사실을 공식 확인했음.

##### ● 北외무성 부상 “북-중 우호 불변 과시”(12/29)

- 김영일 북한 외무성 부상은 28일 “올해 북한과 중국은 일련의 행사를 통해 양국의 우호관계를 전 세계에 과시했다”고 말했음.
- 김 부상은 이날 평양의 중국대사관에서 열린 송년 리셉션에서 북-중 관계를 심화, 발전시켜 나간다는 게 북한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음. 이에 대해 류샤오밍(劉曉明) 주북 중국대사도 북-중 우호의 해인 2009년에 열린 행사들은 양국 국민의 우정과 이해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화답했음.

#### 라. 일·북 관계

##### ● “북·일 비밀접촉, 북측 제의로 성사돼”(1/3)

- 지난해 여름 이후 중국 베이징(北京)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진행된 일본 민주당과 북한간 비밀접촉은 북한의 제의로 성사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또 북한은 이 자리에서 과거에도 제의한 이른바 ‘적군과 추방’ 문제를 타진했을 가능성이 크며, 일본인 납치문제 등 현안에 대해 양측은 입장을 조율했으나 구체적인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북측의 외





교소식통은 전했다. 일본 측은 적군과 문제에 대해 ‘북한이 보호 중인 자국민 적군과 요원을 추방하면 국내법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은 1970년 도쿄발 후쿠오카행 일본항공(JAL)의 요도호 납치에 관여했던 일본 적군과 요원 4명(북측은 3명만 인정)을 아직 보호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적군과 추방’ 방안은 북한이 적군과 요원들을 자국 영토 밖으로 내보내면 일본이 영사권 행사 차원에서 이들을 인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함.
- 한 소식통은 “북·일 접촉은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접촉이라기보다는 일본 민주당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아직 주요 현안에 있어 실질적인 성과는 없다고 들었으며 북한의 진정성이 확인되면 일본 정부 또는 정치권에서 후속 접촉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북한에서 만나자고 하니 일본 민주당 측에서 그 진의를 파악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과거 6자회담 내에 설치된 북일 관계정상화 실무그룹회의 등에서 이른바 ‘일본인 납치사건’에 대한 재조사 등 추가 조치에 대한 논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 ● “北-日, 납치자 문제 수회 극비 접촉”(1/3)

- 일본 민주당과 북한 정부 관계자들이 작년 여름 이후 일본인 납치피해자 문제 협의를 위해 중국에서 수차례 접촉했다고 산케이신문이 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북한은 납치피해자 가운데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참의원 선거가 있는 올 여름 이전 공식협의를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민주당과 북한의 비밀접촉은 일본의 총선 이전인 작년 여름부터 시작돼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정권 출범이후 본격화됐다고 전했다. 비밀접촉은 두 갈래로 진행됐으며, 하나는 민주당의 최고실력자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 간사장 측근이 거의 매월 1차례 꼴로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을 방문하는 형태로 이뤄졌음.
- 다른 하나는 민주당 정권 출범 이후인 작년 10월 중순 별도의 당 관계자가 하토야마 총리 측의 지시로 중국을 방문해 북한의 고위 인사와 현안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이었음. 일련의 접촉을 통해 민주당 측은 북한에 일본인 납치피해자의 행방을 확인해 줄 것을 거듭 요구했음. 민주당 소식통에 따르면 비밀 접촉에는 북한 측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측근인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음.
- 이와 관련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납치피해자) 생존 정보의 진위는 알 수 없지만 북한이 민주당 정권의 생각을 탐색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 하토야마 총리는 작년 12월 방북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북한을 방문할 필요가 있다면 가겠다”고 적극적인 방북 의사를 표명하며 있음.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작년 10월 중국 방문 당시 원자



바로 총리와 회담에서 ‘일본과 관계개선 용의가 있다’고 밝혔으며, 중국은 일본 측에 ‘북한과 대화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음.

#### 마. 기타

##### ● “그랜드바겐 위한 남북정상회담 필요” <KIDA>(1/3)

-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3일 올해 북한이 6자회담보다는 북·미관계 개선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파상적인 공세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한 접촉을 통해 북한을 설득하는 전략적 개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IDA는 이날 ‘2009년 안보환경 평가와 2010년 전망’이란 보고서를 통해 “북한 비핵화 협상의 전격적 타결 가능성이 크지 않으나 협상과정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그랜드 바겐 방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한 다양한 접촉을 통해 북한을 설득하는 등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일정 수준의 전략적 개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KIDA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한국 자체의 군사적 능력을 강화할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핵 협상 전망과 관련, KIDA는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 방북과 북·미 고위급회담 성사로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통한 조속한 북핵문제 해결 가능성은 작다”면서 “북한은 올해 6자회담보다는 북·미관계 개선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파상적인 공세에 주력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에 따라 북핵 문제는 작년과 같은 상호 대치국면이 지속하는 가운데 쌍방의 의지와 능력을 약화하기 위한 ‘전략적 게임’이 지배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KIDA는 분석했다.
- 북한의 핵 능력과 관련, KIDA는 “2차 핵실험을 통해 북한이 확보한 폭발력은 최대 20kt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는 대도시 인구 밀집지역에 투하되면 수십만 명의 사상자를 발생하는 심각한 안보위협 요인”이라며 “다만, 핵탄두 소형화 기술의 완성에는 도달하지 못했으며 단기간 내 소형화 능력을 보유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북한의 대외정책에 대해서는 “올해에도 북·미 직거래 관계 구축과 북·중 협력 유지에 중점을 둔 대남·대외정책을 지속할 것”이라며 “북한에 경제적 이익을 주는 인도주의적 지원에는 융통성을 보이면서도 대남 정치·군사적 기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KIDA는 “북·미관계 구축이 예상보다 부진하면 또 다른 강경수단 구사도 예상되지만 3차 핵실험은 자제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미국에 대한 결단 촉구 차원에서 남북한 군사적 긴장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했다. 특히 “서해상 평시 사격 지역 선포는 올해 군사적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한 복선 또는 사전 포석의 성격을 띠는 것으



로 판단한다”면서 “서해에서의 긴장 재현 시 북한의 일방적 피해로 끝난 대청해전의 복수전을 기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음.

- 아프가니스탄 정세와 관련, KIDA는 “아프간의 치안군 육성을 강화해 아프간 독자적으로 반군에 대응하는 역량도 다소 증진될 것”이라며 “올해는 아프간 정세 변화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한국군과 민간요원에 대한 탈레반의 테러행위를 철저히 경계해야 하며, 만약의 가능성에 대비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도전과 의무를 감수하는 당당한 자세를 대내외에 보여줘야 한다고 KIDA는 강조했다.
- KIDA는 “한국인 희생자 발생시 미흡하게 대응하면 사회 전반은 물론 군의 사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군의 사기가 흔들리면 대북 대비태세뿐 아니라 반미정서 확대로 한미동맹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지난 2007년 탈레반에 의한 한국인 선교사 피랍사태 때 노무현 정부가 보여줬던 나약한 모습이 재현돼서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 ● 北공동사설 “대화로 평화체제·비핵화 실현할 것”(1/1)

- 북한은 1일 발표한 신년 공동사설에서 북미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대화를 통해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음. 공동사설은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는 조(북)·미 사이의 적대 관계를 종식시키는 것”이라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를 마련하고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의 입장은 일관하다”고 밝힌 것으로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북한의 이 같은 입장은 지난달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평양을 방문해 북미 대화가 재개된 것을 토대로 올해 평화체제와 비핵화 논의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됨.
- 이 사설은 노동신문, ‘조선인민군’(군보), ‘청년전위’(청년동맹 기관지) 3개지에 ‘당 창건 65돌을 맞는 올해에 다시 한 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는 제목으로 동시에 실렸음. 공동사설은 대남 정책과 관련, “(2010년은) 6.15북남공동선언 발표 10돌이 되는 해”라며 “북남관계 개선의 길을 열어 나가야 한다”고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도 피력했음. 사설은 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기초해 북남 관계를 개선하려는 우리의 입장은 확고부동하다”면서 “남조선 당국은 북남공동선언을 존중하고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제안했음.
- 북한 내부문제와 관련해서는 “인민생활 향상에서 결정적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일대 공세를 벌이는 것이 올해의 총적인 투쟁방향이고, 경공업과 농업은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의 주공전선”이라면서 ▲인민소비품 증산 ▲지방공장 풀기동 ▲농업증산 ▲유기농업 등 새로운 농법 수용을 촉구했음.



- 사설은 이와 함께 “인민생활과 관련된 부문들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늘리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경공업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를 제때에 보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대외시장을 확대하고 대외무역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음.
- 사설은 화폐개혁 등 경제 조치와 관련, “상품 유통에서 사회주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인민봉사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원활한 재화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 “北김정은 내년 ‘후계자’ 추대될 수도” <전문가>(12/31)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 정은이 노동당 창건 65주년인 내년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후계자로 공식 추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세종연구소의 정성장 수석연구위원이 주장했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세종연구소의 ‘정세와 정책’(2010년 1월호)에 실린 ‘2010년 북한 정세 전망’이란 글에서 “2008년 여름 김정일 총비서의 건강 악화가 2009년 들어 김정은 후계체계 구축의 요인이 된 것처럼, 2010년에도 김정일의 건강 상태가 북한 국내정치의 중대 변수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음.
- 그는 이어 “현재 북한의 권력은 김정일 60%, 김정은 30%, 장성택(당 행정부장)·김영춘(인민무력부장)·오극렬(국방위원회 부위원장)·리제강(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등 김정일 측근 10%로 나눠 갖고 있다는 평가가 북한 내부에서 나올 정도”라며 “김정은은 노동당의 과장급(남한 정부의 국장급) 이하 간부에 대한 인사권을 장악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음. 그는 또 “현재 김정은의 영향력은, 1973년 김정일이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에 임명된 것과 비슷한 수준”이라면서 “2010년에는 김정은이 당 총비서 다음으로 중요한 조직비서에 임명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음.

### ● “北화폐개혁 성공, ‘외부변수’에 달려” <통일연>(12/31)

- 북한 화폐개혁의 성공 여부는 핵문제 해결 등을 통한 대외관계 개선과 중국의 지원 등 ‘외부 변수’에 달려다는 통일연구원의 분석이 나왔음. 통일연구원(원장 서재진)은 31일 발표한 ‘2010 정세 전망’ 보고서에서 “화폐개혁으로 북한은 경제 통제력 회복, 공식경제 활성화 등에서 단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축소된 시장을 대체할 공식 유통체계 구축, 생산 정상화, 식량부족 해소 등 만만치 않은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음.
- 보고서는 “만약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가 진전된다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이 증가하고 남북간 경제 관계도 개선돼 미약하나마 북한 경제가 성장 국면에 접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음.
- 보고서는 이어 “북한의 내년도 경제 정책은 시장통제 강화라는 측면





에서 올해의 보수적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면서 “하지만 화폐개혁의 후속 조치로 금융 부분의 제도 개선을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 일례로 “주민들의 저금을 유도하고 기업이나 국영상점에 효과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예금의 자유로운 출금을 보장하는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대내적 ‘최대 위기’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악화를 지목하고 “북한이 (강성대국 건설의 해로 선언한) 2012년까지 김정은(김정일 위원장의 3남) 권력승계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내부적 권력구도가 개편될 수 있다”고 내다봤음.
- 보고서는 이와 함께 경제난 타개와 후계구도 구축 등의 문제로 시기에 쫓기는 북한이 남북 관계를 계속 경색 국면에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내년도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했음. 보고서는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북핵문제의 일정한 진전과 이명박 대통령의 그랜드바겐 제안에 대한 북한의 호응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만약 북한이 원하는 대로 6자회담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국면전환을 위해 서해상에서 다시 군사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음.
- 이밖에 지난 추석 이산가족 상봉 때 북한이 물질적 대가를 바라고 있음을 드러낸 만큼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같은 남북간 현안의 진전 여부는 우리 정부의 대북지원에 달려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음.

### ● 北노동신문, 한미 ‘국방지침’ 추진 비난(12/30)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30일 한국과 미국의 국방지침(Defense Guideline) 제정 추진에 대해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노동신문은 ‘모험적 전쟁도발 기도’라는 제목의 개인 논평에서 “미국이 남조선과 조선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미국·남조선 국방지침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는 공동의 전쟁지침 작성으로 우리 인민에 대한 도전이며 노골적 평화파괴 행위”라고 주장했다.
- 신문은 또 “미국은 말로는 조선반도 평화요 뭐니 하지만 뒤에선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 준비를 하면서 정세를 최악의 상태로 몰고 있다”며 “국방지침 추진은 남조선군과 공동작전을 구체화하고 법제화하려는 범죄행위”라고 비난했음.
- 한미 양국은 한국전쟁 발발 60주년인 내년을 목표로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 보장 ▲핵 확장억제 구현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한·미 국방지침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 연탄나눔 운동, 北에 ‘사랑의 연탄’ 5만 장 전달(12/29)

-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부천시부는 영하 15도 안팎의 매서운 추위를 보인 29일 오전 북한 개성지구에 연탄 5만 장을 전달했음. 부천 연탄나눔운동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연탄을 25t 트럭 8대에 나눠 싣고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개성으로 들어갔음. 부천 내동교회 천성환 목사와 신자 9명, 연탄나눔운동 실무자 1명 등 10명도 차량 2대에 나눠 타고 동행했음. 천 목사와 신자들은 지난 10월 부터 모금운동을 벌여 연탄을 준비했음. 이들은 개성공단 북쪽 경의선 봉동역에서 북한 주민들과 함께 연탄을 하역하고 점심을 먹은 뒤 오후 2시30분께 돌아올 예정임. 이날 연탄 전달은 개성지구로 가는 올해 마지막 행사로, 30일 금강산지구에 연탄 5만장을 전달하면 올해 북한과 합의한 50만장을 모두 전달하게 됨.
- 2004년 10월부터 시작한 북한에 연탄 보내기 운동은 현재까지 970만 장을 전달, 내년 1월14일 개성지구와 금강산지구에 동시에 연탄을 전달하면 1천만 장을 돌파하게 됨.

### ● 북한 인권단체 남아공 북한대사관서 집회(12/28)

- 전 세계 북한 인권 및 탈북자 관련 단체들의 네트워크라고 주장하는 ‘자유와 생명 2009’ 회원들이 28일 오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집회를 열고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했음.
- 이 모임 회원 10명은 이날 수도 프리토리아에 위치한 북한대사관 앞에서 기도회를 열고 ▲모든 정치범의 즉각적인 석방 ▲정치범 및 기아·고문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을 요구했음. 이들은 성명에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는 북한 정부를 불법적·비합법적·범죄적으로 만드는 요인으로, 국제 공동체의 즉각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이유”라고 주장했음. 이들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서와 북한 인권실태 자료를 북한대사관 측이 접수하기를 거부하자 대사관 정문 우체함에 이를 집어 넣은 뒤 50여분 만에 해산했음. ‘자유와 생명 2009’는 전날 일본 도쿄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본부 앞에서 촛불 시위를 벌였으며, 30일에는 서울과 미국 뉴욕, 영국에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음.

### ● “北, 주민 외화보유·사용 금지”<데일리 NK>(12/28)

- 북한 당국이 화폐개혁의 후속 조치로 미국 달러 등 외화의 보유와 사용을 전면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음. 북한 전문 인터넷매체인 데일리 NK는 ‘함경북도 소식통’을 인용, 북한의 인민보안성(경찰청 해당)이 지난 26일 달러, 유로, 위안 등 외화의 보유와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포고문을 발표했다고 28일 보도했음.
- ‘공화국내에서 외화를 남발하는 자들을 엄격히 처벌할 데(처벌하는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이 포고문에 따르면 개인, 무역기관은 물론 외국인까지 북한 내에서 외화를 사용하지 못하며 은행을 제외한 개인



과 기관들의 경우 외화를 보유할 수도 없음.

- 내각 결정에 따른 것으로 알려진 포고문은 또 개인이 상거래를 통해 외화를 획득하거나 사용하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 현재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도 국가가 몰수한다고 밝힌 것으로 데일리NK는 전했다. 아울러 북한의 무역기관이 수출을 통해 확보한 외화도 24시간 내 은행에 입금해야 하며, 위반하면 법적 제재와 함께 자금을 몰수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고문은 인민보안성 발표와 동시에 각급 기관, 기업소, 공공장소 등에 게시돼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고 데일리NK는 덧붙였다.
- 한편 대북 라디오방송인 열린북한방송도 28일 중국에서 대북 무역을 하는 사업가의 말을 인용, 내년 1월1일부터 북한에서 외화를 일체 쓸 수 없게 됐다는 방침이 내려왔다고 전했다. 북한 당국은 지난 4일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를 통해 화폐개혁 사실을 처음 확인하면서 “앞으로 상점, 식당 등에서 외화로 주고받는 일은 없어지게 되며 외국인이 가는 상점에서도 화폐교환소에서 외화를 조선 돈으로 교환해 써야 한다”고 밝힌 바 있음.

#### ● “北, 신종플루 긴급대상 11호 지정” <좋은벗들> (12/28)

- 북한은 최근 신종플루 사망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치료 후 재발 환자까지 급증하자 이른바 ‘11호’ 긴급조치를 발동, 전시 상황에 준해 신종플루 환자들을 우선적으로 치료하고 있다고 대북인권단체 ‘좋은벗들’(이사장 법륜 스님)이 28일 밝혔다.
- 법륜 스님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09 북한사회동향 보고회’에 발표자로 나서 “과거 북한은 전쟁과 같은 극한상황에서 가장 치료가 급한 부상병이나 세균감염자를 11호 대상자로 분류해 특별 관리했다”면서 “이번 신종플루의 전염 속도와 위험성을 의식해 11호 조치를 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내 소식통을 인용, “11호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아무 교통수단이나 임의로 세울 수 있고 거부하면 행정처벌은 물론 형사 처벌까지 받는다”며 “일례로 북한은 6.25 전쟁 당시와 2002년 서해교전 때 부상병들을 11호 대상자로 처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 그는 또 “북한의 이번 신종플루는 중국 단둥(丹東)을 거쳐 전파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11월에만 신의주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등 40여명이 사망했고 현재는 북한 전역에 확산돼 교화소 면회까지 금지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 “로버트차 입북 전 영상, 탈북자가 인도 거부” (12/28)

- 재미교포 대북 인권운동가인 로버트 박씨가 지난 25일 입북하기 직전 기도 장면 등을 담아 동영상을 촬영했는데, 박씨의 입북을 도운 탈북자가 사례금 1억 원을 요구하며 넘겨주지 않고 있다고 박씨의 동료 인권운동가가 주장했다. 박씨와 연대활동을 펼쳐온 팩스코리아의



조성래 대표는 28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로버트 박씨가 두만강을 건너 북한으로 들어가기 직전 북한의 인권문제를 알리기 위해 촬영해둔 동영상이 있다”면서 “그런데 박씨와 동행했던 탈북자 중 한 명이 사례금 1억원을 요구해 아직 넘겨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 조 대표는 이어 “박씨는 북한으로 들어가기 앞서 25일 오전 11시께 마지막으로 나한테 전화를 걸어 ‘북한 주민들을 위해 기도하는 동영상을 찍어둘 테니, 전 세계에 알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해 달라’고 당부했다”면서 “현재 중국에 있는 이 탈북자한테 동영상을 돌려줄 것을 한국 경찰을 통해 종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 탈북자는 동영상을 국내외 언론에 팔려고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2. 주변국 관련

### 가. 한·중 관계

#### ● **李대통령-후진타오 주석 새해 메시지 교환(1/1)**

-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중국 방문의 해’ 행사의 일환으로 1일 새해 인사를 나누는 메시지를 교환했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양국 정상은 이번 메시지 교환을 통해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구축 등 그동안의 비약적인 양국관계 발전을 평가하고 새해에도 양국 간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올해 중국 방문의 해 행사와 상하이 엑스포, 2012년 한국 방문의 해 행사와 여수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 양국 정상은 지난 2008년 8월 후 주석의 방한 시 상하이 엑스포와 여수 엑스포가 개최되는 2010년과 2012년을 각각 중국 방문의 해와 한국 방문의 해로 지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나. 미·일 관계

#### ● **“日조사委, 美·日 밀약 대부분 사실 확인”(12/29)**

- 한반도 유사시에 미군의 일본 기지 사용 자유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 미국과 일본 간 밀약 대부분을 일본 외무성 조사위원회가 사실로 확인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 익명의 일본 정부 관계자는 조사위가 1960년 상호안전보장 조약 개정과 1972년 오키나와 반환 등과 관련한 미·일 밀약 4개 중 3개를 사실로 확인했다고 이날 말했다.
- 조사위가 사실로 확인한 미·일 밀약은 핵무기를 탑재한 미국 군함의 기항·통과, 한반도 유사 상황 시 미군의 일본 내 기지 사용 자유, 위기 상황 시 미국의 오키나와 핵무기 반입 등과 관련된 합의임. 조사위는





미국이 오키나와를 일본에 반환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비용을 공동분담하기로 합의한 밀약의 존재를 확인하진 못했지만 사전 폐기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음. 도쿄 대학의 시니치 카타오카 교수 등 6명의 외부인사로 구성된 일본 외무성 산하 조사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고서를 내년 1월 말 내놓을 예정임. 미국 측은 일본과의 밀약의 존재 여부를 이미 확인했지만 자민당 정부는 밀약의 존재를 부인해왔음.

-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가 9월에 취임하자마자 오카다가쓰야(岡田克也) 일본 외상은 밀약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음.
- 한편 미국과 일본 정부는 현재 오카다 일본 외상의 미국 방문을 추진 중이라고 이날 밝혔음. 다만 방문 사실 자체 및 구체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음.
- 오카다 외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후텐마(普天間) 미군 비행장 이전 문제와 관련해 기존 미·일 합의에 입각해 오키나와 내에서 재배치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음. 그는 “만약 우리가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낸다면 채택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기존 계획도 살아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 ● 美, 하토야마 외교정책에 우려(12/29)

-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총리 취임 이후 미국과 일본 간 오랜 우방 관계가 흔들리는 조짐을 보이면서 미국 정부가 일본의 외교정책 변화를 우려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 인터넷판이 29일 보도했음. 대미외교에서 보다 확고한 태도를 취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내세웠던 하토야마 총리와 민주당은 오키나와(沖繩)현 후텐마(普天間) 비행장 이전 문제를 놓고 미국과 대립하고 있음. 양국은 후텐마 비행장을 오키나와 내 슈와브 주일미군 기지로 옮기기로 2006년 합의했으나 하토야마 총리 정부는 이를 반대하고 새로운 이전 지를 찾고 있음. 하토야마 총리는 또한 미 해병대 8천명을 오키나와에서 괌으로 이전하는 계획에도 반대하고 있음.
- 미국 관리들은 하토야마 총리를 변덕스러운 지도자로 보고 있음. 하토야마 총리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에게 비행장 이전 문제를 연말까지 해결하겠다고 두 차례에 걸쳐 약속했으나 지난 17일 코펜하겐 기후회의 만찬 석상에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에게 자신은 이 문제와 관련, 연말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
- 하토야마 총리는 만찬 후 일본 기자들에게 결정을 보류하겠다는 일본의 입장에 대해 자신이 클린턴 장관의 “충분한 이해”를 구했다고 밝혔음.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달랐음.
- 최근 클린턴 장관은 이례적으로 후지사키 이치로(藤崎一郎) 일본대사를 불러 비행장 이전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 워싱턴의 외교 분석가들은 하토야마 총리와 민주당이 여전히 미국과의 안보관계를 중시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이들은 하토야마 총리의 최근 행동이 권력에 익숙하지 않고 사회당 등 연정 파트너들의 관심을 끌 필요가 있는 정치인의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 그러나 미국과 아시아 관리들은 하토야마 총리와 민주당이 미국에서 점차 벗어나 보다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취할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음.
- 최근 하토야마 총리는 미국을 배제한 채 한국 및 중국과 함께하는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을 촉구했으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이례적으로 지나치게 환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은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 민주당 간사장 같은 중진들이 중국과 보다 긴밀한 관계를 갖고 대미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일본을 몰고 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것이 일본에서 뿐 아니라 한국 등 다른 지역에서의 미국의 입장을 복잡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 한 외교관은 미일관계는 일본 방위라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 전체지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의 기본이 된다고 전제하고 중국이 부상하는 상황에서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의 입장이 약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 임명을 요구한 또 다른 외교관은 하토야마 총리의 지지율이 50% 아래로 떨어진 반면 오바마 대통령은 여전히 인기가 있다는 점을 들어 “하토야마 총리는 미국을 다루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 日 오자와 “후텐마, 주민 목소리 들어야”(12/29)

- 일본 정계의 최고 실력자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 민주당 간사장이 후텐마(普天間) 미군 비행장 이전 문제와 관련, 기존 미·일 합의 이행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NHK방송이 29일 보도했다.
- 오자와 간사장은 28일 중의원 외무위원장인 신당대지의 스즈키 무네오(鈴木宗男)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오키나와(沖縄)현 후텐마 비행장 이전 문제와 관련, “오키나와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 그는 또 기존 미일 합의안인 오키나와현 나고(名護)시 캠프 슈와브 연안으로의 이전 문제에 대해 “우리의 푸른 바다가 매립되는 것이 좋겠느냐”고 반문해 캠프 슈와브로의 이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간접적으로 표시했다. 오자와 간사장이 취임이후 후텐마 비행장 이전 문제와 관련해 이렇게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임.



## 다. 미·러 관계

### ● 푸틴 “美 미사일방어체계가 핵군축협상 방해”(12/29)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는 29일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가 핵무기 감축 조약에 관한 협상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푸틴은 이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기자들에게 유럽에서 미국이 추진하는 미사일 방어 계획이 미국과 러시아간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고 있다며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우리가 공격용 무기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러시아는 미국 미사일 방어 계획에 대한 정보에 더 많이 접근하기를 원하고 있다며 이런 요구를 새 핵 조약과 연계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 미국과 러시아는 1991년 체결된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1)을 대체할 후속 협정 타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임. 러시아 정부는 핵무기 수준의 파괴 능력을 지닌 미국의 차세대 비핵무기에 이미 우려를 표명했으며, 함대용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개발하겠다는 미국의 최근 계획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나타낸 바 있음. 푸틴은 과거 폴란드에 요격 미사일을, 체코에 레이더 시스템을 각각 배치하겠다는 미국의 기존 계획을 비판했지만, 진행 중인 전략무기감축협정 협상과 수정된 미사일 방어 계획을 명백하게 연관시킨 적은 없었음.

## 라. 일·러 관계

### ● 日-러, 영토협상 진전 없어 (12/29)

- 러시아를 방문 중인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일본 외상이 영토협상을 진행했으나 인식의 격차를 메우지 못했다고 일본 현지 언론이 29일 보도했음. 오카다 외상은 28일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상과 일본이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북방영토’ 문제에 대해 협의했음.
- 오카다 외상은 “영토 귀속(반환)에 대한 눈에 띄는 진전이 없다”고 불만을 표시한데 대해 라브로프 외상은 “문제 해결을 인위적으로 지연시킬 의도는 없으나 국제법과 2차 세계대전 이후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음.
- 일본과 러시아의 정상은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정권 출범 후 두 차례 만나 북방영토 문제를 논의했으나 평행선을 달리고 있음. 일본이 주장하는 ‘북방영토’는 홋카이도(北海道) 북서쪽의 에토로후(擇捉), 쿠나시리(國後), 시코탄(色丹), 하보마이(齒舞) 등 4개 섬으로 국제적으로 쿠릴열도로 통합.
- 1855년 모다 조약을 통해 일본이 차지한 이래 1905년 러·일 전쟁에서 북위 50도 이남의 사할린을 점령함으로써 그 아래에 있는 4개 섬은 일본령으로 인식돼왔으나 1945년 일본이 패망한 후 소련이 자국 영토로 지배해왔음.



## 마. 기타

### ● 정부, 1천명 이상 PKO 파병 추진(12/31)

-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유엔 평화유지군(PKO) 참여규모를 1천 명 이상으로 증원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아프리카 분쟁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신규 파병에 나서기로 했음. 이는 소위 'PKO 신속파견법'인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법이 29일 국회를 통과한데 따른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지만 파병의 성격과 규모를 놓고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 외교통상부는 31일 오전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통일부, 국방부와 합동으로 가진 '2010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이같이 밝혔음. 11월 현재 우리나라의 PKO 파병규모는 401명으로 유엔 회원국 중 39위를 차지하고 있음. 레바논 평화유지군에 367명 규모의 보병부대가 참여하고 있으며 인도, 파키스탄, 라이베리아, 아프가니스탄, 수단, 네팔, 다푸르, 동티모르, 코트디부아르, 서부사하라, 아이티에 치안유지 또는 정전감시 명목으로 소규모의 장교와 옵서버들이 파견돼있음.
-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의 PKO 예산분담 수준(10위)과 국제적 위상을 감안할 때 PKO 참여규모가 1천명 이상이 돼야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수단이나 DR콩고 등 분쟁이 많은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유엔과의 협의와 현지 수요파악을 거쳐 구체적인 파병규모와 대상지역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음. 이와 관련, 외교부는 내년 12월 제4차 평화지원활동(PSO) 국제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음.
- 외교부는 또 내년 11월 개최되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성공 개최하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고 주요 재외공관에 G20 담당관을 지정, 총력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회원국 경제인들의 참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음. 이와 함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GNI(국민순소득) 대비 0.1% 수준인 ODA(공적개발원조) 규모를 내년 0.13%로 끌어올리고 2015년까지 0.25%(약 30억 달러)로 증액해나갈 계획임.
- 북핵 문제와 관련, 외교부는 북한의 불가역적 비핵화 조치를 목표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9월 제안한 '그랜드 바겐'(일괄타결)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음.
- 외교부는 내년 정상외교의 방향과 관련,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해 주변4강 관계의 전략적 격상에 주력하고 올해에는 신아시아 외교에 치중했으나 내년에는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로 정상외교의 지평을 확대해나가기로 했음.
- 외교부는 한·중·일 삼각협력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5월 하순 제주도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주최하고 한·중·일 산관학(産官學) 공동연구를 통해 한·중·일 FTA(자유무역협정) 협의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음. 외교부는 올해 UAE(아랍에미리트) 수주를 계기로 기업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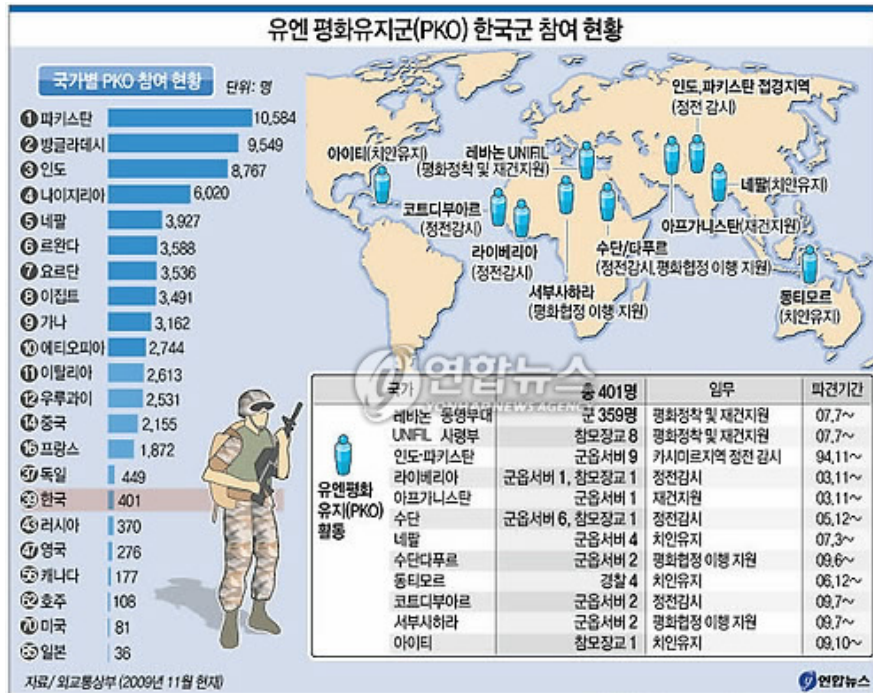


해외활동을 지원하는데 외교적 노력을 배가하기로 하고 원전과 T-50 (고등훈련기) 수출 지원활동을 적극 전개해나가기로 했음.

- 외교부는 이밖에 2013년까지 해외봉사단(World Friends Korea) 규모를 2만 명으로 늘리고 워킹홀리데이(취업연수) 프로그램 참가자를 6만 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음.

● <그래픽> 유엔 평화유지군(PKO) 한국군 참여 현황(12/31)

-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유엔 평화유지군(PKO) 참여규모를 1천명 이상으로 증원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아프리카 분쟁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신규 파병에 나서기로 했음. 외교통상부는 31일 오전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통일부, 국방부와 합동으로 가진 '2010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이같이 밝혔음. <그래픽 참고>.



박영석 기자 zeroground@yna.co.kr / 20091230

zeroground@yna.co.kr



[참고 1] <北 신년공동사설 분야별 요지> (연합뉴스, 1/1)

- 북한은 1일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3개 신문에 올해 주요 정책 방향을 담은 신년 공동사설을 발표했다.

- 다음은 분야별 요지.

- ◇남북·대외관계 = 올해는 역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 발표 10주년이 되는 해다. 2000년 북남수뇌상봉(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 발표는 조국통일 위업 수행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우리는 지난해 악화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기 위해 주동적인 조치들을 취하면서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였다. 우리는 올해 ‘북남공동선언의 기치 아래 민족이 단합해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는 구호를 들고 나가야 한다. 북남관계 개선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기초해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려는 우리의 입장은 확고부동하다.

남조선 당국은 대결과 긴장을 격화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며 북남공동선언을 존중하고 북남대화와 관계 개선의 길로 나와야 한다.

오늘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근본 문제는 북미 사이의 적대관계를 종식하는 것이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를 마련하고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의 입장은 일관하다.

- ◇정치 = 새해는 혁명적 대고조의 자랑스런 승리와 성과에 토대해 인민생활 향상에 전당적, 전국가적 힘을 집중해야 할 총공세의 해다.

당은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안아오기 위한 웅대한 구상과 작전을 펼치고 있다.

혁명적 대고조의 불길 드높이 인민생활 향상에서 결정적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공세를 벌리는 것, 이것이 올해의 투쟁 방향이다.

인민생활을 높이는 것은 경제 사업이 아니라 아버지 수령님(김일성 주석)의 유훈을 관철하고 인민들의 이상을 꽃피우기 위한 당의 위업의 정당성을 과시하는 중요한 정치적 사업이다.

- ◇경제 = ‘당 창건 65돐을 맞는 올해 다시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해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 경공업과 농업은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의 주전선이다. 전당적, 전국가적 힘을 집중해 인민 소비품 생산을 대대적으로 늘여야 한다.

농업부문에서는 종자혁명 방침, 두벌농사 방침, 감자농사혁명 방침, 콩농사 방침을 비롯한 당의 농업혁명 방침을 빛나게 구현해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야 한다.

인민생활과 관련된 부문들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결정적으로 높이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경공업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들을 제 때 보장해야 한다.

대외시장을 확대하고 대외무역 활동을 적극 벌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해야 한다.

상품유통에서 사회주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인민봉사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올해 총공세에서 새 비약을 이룩하기 위한 근본 비결은 모든 분야에서 침단을 돌파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리는 데 있다.

침단 돌파전의 기본 전선인 국방공업 부문에서 강성대국의 대문을 두드리는 승리의 포성이 계속 울려나오게 해야 한다.

- ◇**군사** = 전군이 부대지휘 관리를 개선하고 군기를 철저히 확립해 최정예화된 혁명강군의 면모를 더욱 힘있게 과시해야 한다.

인민군대는 순간의 안일도 없이 언제나 고도의 격동 상태를 견지해 적들의 어떤 도발책동도 단호히 짓부숴버릴 수 있게 전투동원 준비를 빈틈없이 갖춰야 한다.

‘인민을 돕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선군조선의 밑뿌리인 군민일치를 철통같이 다져나가며 사상정신과 도덕, 체육과 예술 등 모든 면에서 사회의 본보기가 돼야 한다.

- ◇**2009년 평가** = 지난해는 조국에 큰 변화가 있던, 인민의 이상이 실현되는 시대가 펼쳐진 극적 전환의 해였다.

우리 기술로 인공위성 ‘광명성 2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하고 2차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것은 강성대국 건설에서 승리의 첫 포성을 울린 역사적 사건이었다.

당의 영도 하에 나라의 경제가 본격적 상승단계에 들어섰다. 인민경제의 선행부문, 기초 공업부문에서 생산이 획기적으로 성장하고 전반적 공업부문이 활성화됐다.

지난해 이룩된 대고조의 승리는 바야흐로 강성대국 선포의 승전고가 울려 퍼질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확증해줬다.